

정보인권을 둘러싼 논란의 근원은 정보화의 추진 동력에서 찾을 수 있다. 정보화의 기원과 확산 과정을 둘러싼 분석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체로는 자본주의가 1970년대 축적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채택한 전략이라는 학설이 인정되고 있다. 포드주의의 위기와 오일쇼크, 이윤율 하락 등의 위기에 직면한 자본이 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비시장 영역을 전유하기 위하여 산업을 정보화하고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정보상품을 발굴했다는 것이다.

인터넷에는 충분히 막대한 자본이 투여되어 왔고 그만큼 이윤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재구조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대중이 일구어온 인터넷 점유는 자본의 재점유에 포섭되고 있다.

정부는 과도적 포털과 통신사업자를 매개로 한 인터넷 통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되고 추적된다는 점에서 인터넷은 매스미디어에서보다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로 신원을 확인하고, 로그기록으로 각 이용자가 읽고 쓴 인터넷 활동과 통신 기록을 추적할 수 있다. 이용자가 올린 글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이름으로 사상 검증을 하고 명예훼손이라는 명분으로 기업 비판을 순화시킨다. 선거시기에도 선거에 대하여 입도 뻥긋할 수 없다. 포털에 가해지는 통제는 곧 대중에 대한 통제이다.

무엇보다 정보화의 주요한 추진 동력이 행정의 효율성과 시장의 이윤에서 나온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성찰할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 역시 이런 우선순위 속에서 국민의 인권을 확대하고 민주주의를 증진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일반 대중이 처한 이러한 현실 속에서 행정 정보화만으로 전자 민주주

이에 최근 '정보인권'은 여러 가지 대응과 모색을 취해 왔다. 정보 인권은 정보화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이 계속 존중되어야 한다는 선언이자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다. 1980년대부터 국제사회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 인터넷을 비롯한 전자 매체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접근하고 다양하고 창조적인 정보를 생산하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커뮤니케이션의 권리'에 주목해 왔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정보화를 거부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왔다. 즉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화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지문날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작업장에 도입되는 생산설비와 CCTV에 대하여 노동자들이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인프라적 측면만 보면 한국은 꽤 높은 정보화의 수준을 달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인권과 민주주의 발달 수준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수준이다. 아니, 인권과 민주주의가 정보화로 인하여 더 큰 위기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정보인권 활동가들의 우려이다. 이러한 간극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앞으로의 정보사회가 희망찰 것이다.

‘지나가다’ 님의 비애

-네티즌의 선거참여를 막는 수많은 규제들

유영주 | www.yyjoo.net

성은 지, 이름은 나가다. 1989년생. 웹서핑, 블로그, 인터넷뉴스, 동영상 UCC 제작 활동에 관심 많음. 곳곳에 ‘지나가다’란 이름으로 댓글과 게시물을 올림. 꾸준하고 오랜 활동으로 네티즌 간에는 상당히 알려진 유명인사. 지나가다2, 지나가며, 지나가라 등 모방네티즌 다수.

지나가다는 네이버에 블로그를 갖고 있고, 네이버뉴스나 다음 아고라엘 자주 들르며, 인터넷뉴스를 보며 ‘지나가다’라는 이름으로 댓글을 남기고 토론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지나가다’ 님은 올해 온라인상에 나타난 몇 가지 변화 때문에 당혹스럽습니다. 대선에서 투표권이 없어 섭섭한 건 그렇다고 쳐도, 입시 정책을 보면서 맘에 드는 후보와 마음에 안 드는 후보가 있어 UCC를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이게 여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다는 지난 7월27일 정보통신망법 상의 인터넷실명제라는 걸 만났습니다. 일 평균 방문자 30만 명 이상 포털사이트 등에 제한적 실명제가 적용된다는 소식입니다. 네이버와 다음 같은 포털에서 실명 인증을 하지 않으면 글을 남길

수가 없게 됐습니다. 불법콘텐츠와 지적재산권 문제를 들어 P2P와 웹하드 등에도 실명제 도입 이야기도 횡행하는데, 이렇게 되면 블로그 실명제를 포함한 완전 실명제도 머잖은 일입니다.

지나가다는 10월 초 남북정상회담을 보며 북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습니다. 민주노총이나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만날 수 있어 필요할 때 찾아볼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9월 18일 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을 들어 13개 단체 홈페이지에 있는 북 게시물 삭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가보안법을 문제 삼는다 하니 웃기는 짬뽕입니다.

지나가다는 특히 입시 때문에 고민하는 청소년의 모습을 담은 UCC를 제작해서 올리려다 말고 난감해졌습니다.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시물은 안 된다는 선거법 93조 때문입니다. 선관위가 선거법을 근거로 인터넷 글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9월말까지만 약 6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지금도 대선 관련 글은 곳곳에서 삭제되고 있습니다. 한 대학생이 만든 ‘대통령 이명박 께찮은가’ UCC도 선관위 해석에 따라 선거법 위반에 포함돼버렸습니다. ‘지나가다’ 님은 UCC 기획 단계에서부터 자기검열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지나가다 님은 인터넷언론을 찾아 흥미있는 기사에 댓글을 남기며 위안을 삼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오는 11월27일부터 12월18일까지는 ‘지나가다’ 님은 댓글도 못쓰게 됩니다. 선거법 82조 6에 따라 선관위가 인터넷언론사 800여 개를 대상으로 실명인증시스템을 설치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800여 개 인터넷언론에서도 실명이 아니면 댓글을 남기지 못합니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실명 인증하고 들어가서 상상하는 어떤 글을 마음 놓고 쓸 수 있을 지 의문스럽습니다.

경찰관 263명이 전담 사이버 검색요원으로 암약하고, 네티즌 2545명이 사이버 명예경찰관으로 임명됐다 하고, 선관위도 900여명의 사이버감시단을 풀어놓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곳곳에 몰카를 설치해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딱하네요. 인터넷 상에서 '지나가다' 님은 조만간 박물관의 유물이 되고 말지 모르겠군요.

위키랑 다시 시작 해 볼까 해

- 156 위키에 대한 짧은 단상 / 준이
- 161 Wiki in Action / 김승욱
- 166 나도 위키를 맛있게~♪ / 홍지

위키에 대한 짧은 단상

준이 | 민주노총 서울본부 IT 노조 위원장

기존의 게시판, 관리자, 중앙집중식 운영의 인터넷



우리는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정보들을 주고받고 토론을 한다. 때로는 2002년 발전노조의 파업 때처럼 투쟁에도 활용을 하고 2002년 남한에서의 월드컵과 효순, 미선이의 죽음, 대통령선거 등을 통해 보았듯이 개별적으로 뿔뿔이 흩어 진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인 쟁점

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지배권력과 집권세력이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서로 연결된 사람들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이른바 네티즌을 무책임한 부류의 인간들로 사고를 했다면 현실의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하여 이러한 식의 사고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최근에 위키위키라는 것을 접하고 사용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된다. 한국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티가 급격하게 발전을 하였고 그 어느 나라보다도 게시판 문화가 활발하다. 게시판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며 서로의 생각을 발전시켜 나간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게시판은 처음에 썼던 글은 계속 글이 올라오면서 묻혀지고 게시판 관리자는 불철주야 게시판을 살펴보면서 불필요한 글들을 지우고 관리를 한다. 좋은 정보를 올리면 그 정보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토론을 하지만 정작 게시판에 글을 쓴 원래의 사람이 처음의 정보를 고치지 않으면 원래의 글은 그대로 남아있다. 게시판 관리자는 쌓여만 가는 글에 힘들어만 간다. 게시판이 있으면 거기에는 당연히 게시판 관리자가 있어야 하고 중앙집중적인 관리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머릿속에 굳혀졌다.

누구나 수정할 수 있다고? 그러면 누가 관리하지?

위키위키는 고정된 관리자가 있고 그 사람이 일일이 정보를 수정하고 편집해야 할 의무 아닌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어떤 누가 글을 올린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편리하다고 생각되는 팁을 올렸다고 하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여기에 자기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래의 글을 수정한다. 사이트에 오는 사람 누구나 관리자가 될 수 있고 새로운 글을 쓸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글과 정보를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관리하는 사람과 글을 쓰는 사람이 분리되었다면 위키위키에서는 글을 쓰는 사람이 곧 관리자가 된다. 중앙집중적인 관리를 해야, 관리자가 있어야 사이트가 운영될 수 있다는 믿음 아닌 믿음을 이제 떨쳐버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아무나 글을 수정할 수 있다면 못된 마음먹고 고쳐버리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을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 이전의 정

보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남아있으며 새로 수정한 글은 새로운 버전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프로그래밍을 하는 개발자라면 일반적으로 여러 명이서 공동 개발을 하기 위해 CVS나 RCS 같은 버전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위키위키에서도 버전관리기능을 가지고 있어 과거의 자료를 날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관리자의 손길이 필요하다.

위키위키의 장점은 CVS나 RCS같은 기술적인 부분의 장점이라기보다는 인터넷에서 서로 간에 자유롭게 연대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문화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이트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누군가 한명이 관리자가 되어 죽도록 글을 모니터링하고 편집하고 수정해야 한다는 기존의 게시판식 사고를 떨쳐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위키위키는 외적인 강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 나간다. 거기에는 어떠한 강제도 없다. 개별적인 객체로 남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주체가 될 수 있다.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신뢰에 바탕을 둔 공동체적인 문화이다.

웹2.0, 자발성, 참여 여러 가지 떠오르는 단어들, 그리고 기업들

요즘 웹2.0이란 단어는 지겹도록 많이 듣는 단어이다. 물론 인터넷이 보편화 되고 네트워크 인프라도 빠르게 발전을 하면서 모여드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새로운 기술을 통하여 인터넷상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방식도 달라지고 새로운 가능성도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웹2.0이라고 아주 거창하고 이야기가 되고 화두가 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윤창출을 위한 기반이 되어서가

아닐까 생각도 든다. 인터넷으로 모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잡아내는 것이 인터넷이나 포털기업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고 회원수가 인터넷 기업의 이윤창출의 기반이 된다. 어떤 이는 대중지성과 관련하여 “기업과 자본이 자기네의 이윤 축적을 위해서 사실상 대중지성을 착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네이버가 대표적이다. 또 국가와 기업이 서로 협력하면서 지적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헤게모니 집단으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한 것은 아니지만 고민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 자본의 노동 통제방식에서도 창의성이나 노동자의 자발적인 참여 이야기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하여 노동자의 지성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새로운 부분도 없는 이야기이다. (*)

자본의 강제가 아닌 사람들의 자발적인 연대와 공유의 세상을 꿈꾸며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자마자 우리는 자본의 강제에 맡겨진다. 자본의 논리, 경쟁력의 논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휘말려가는 자신의 삶을 바라본다. 자신의 노동이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하면 할수록 소외되는 기이한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을 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발버둥치게 된다. 사람의 삶은 원래 그런 것이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동료들보다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항상 우리네 삶이 저 자본에 의해서만 강제되는 것일까? 그것은 아닐 것이다. 인터넷 자체가 사람들의 자발적인 연대와 지식공유를 통해 발전해

* <민주화 20년, 지식인의 죽음> II-8 지식사회 새 경향, 대중지성에서 인용

왔다. 특정한 회사의 프로토콜이나 프로그램이 아닌 TCP/IP, http, telnet, ftp, dns 등 공개표준을 통하여 발전해왔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하여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그와는 다른 논리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며 동참하고 있다. 굳이 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기뻐하고 내가 주었던 도움이 다른 사람에게 큰 힘과 기쁨이 될 때 잔잔한 미소를 짓게 된다. 우리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인터넷이 그리고 GNU/리눅스, 공개 소프트웨어 운동은 자본의 논리가 아닌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유라는 반자본주의, 탈자본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발전해왔고 그를 통해 새로운 세상의 희망을 조금씩 느낀다.

그러나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기술자체가 우리네 삶을 발전시키는 것은 아니며 기술이 가진 진보적인 성격이 현실에서는 기업의 전유물로 나타날 수 있다. 위키가 가진 잠재력만을 가지고 자본과 국가통제에 길들여있는 것에 대한 대안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힘들 것이란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도 자본과 이윤의 입장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에 대해서는 무언가(?) 활용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글을 마친다.

위키랑 다시 시작해 볼까 해

Wiki in Action

김승욱 |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saakan99@jinbo.net

위키라는 툴[도구]이 가장 잘 사용되고 있는 곳은 아마도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이다. 그래서 “위키=사전”이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사실 사전은 위키의 다양한 사용법 중 하나일 뿐이다. 위키는 그저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고, 그것을 사용하는 목적과 방법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위키는 홈페이지도 될 수 있고, 블로그도 될 수 있고, 게시판도 될 수 있고, 자료실도 될 수 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오늘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해볼까 한다.

진보넷 회의록

진보넷 회의에 위키를 사용하기 전에는 누군가가 책임지고 회의록을 종합/편집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다. 회의에 참여하는 다른 구성원들은 회의록에 작성하고 싶은 내용을

2008/03

- 2008년 03월 28일 사무국 회의
- 2008년 03월 21일 사무국 회의
- 2008년 03월 14일 사무국 회의
- 2008년 03월 07일 사무국 회의

2008/02

- 2008년 02월 29일 사무국 회의
- 2008년 02월 15일 1차 운영위원회

진보넷 회의록

책임자(사무국장)에게 전달하고, 책임자는 종합해서 문서로 편집하고, 완성된 문서는 회의가 시작될 때이나 테이블에 공개되는 과정.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 회의에서 논의하고 싶은 주제를 제안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다른 사람이 회의록에 제안하는 내용을 알기도 어려웠다. 결과적으로,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제안된 내용에 대해 풍부한 고민을 할 시간적인 여유도 부족하게 된다. 또 회의록을 만들고 있는 사람은 의도하기 않은 순간에 권력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다른 구성원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반영하는 위치에 있다는 권력, 그 내용들을 배치/선별할 수 있는 권력, 또 남들보다 쉽게 제안할 수 있는 권력까지. 이러다보니, 회의에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은 정해져 있고,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

진보넷에서 위키를 이용해 회의록 작성을 하면서 생긴 변화는, 누구나 쉽게 안건을 챙기고,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성원 모두가 말하고 있다. 또 웹에 열려있는 회의록에 언제든지 접근하면서 다른 구성원들이 내용을 추가/수정할 때마다 인지할 수가 있다. 구성원 모두가 언제나 듣고 있다. 그만큼 회의 전에 충분히 고민을 해볼 수 있게 된다. 덕분에 토론은 풍부해지고, 합의는 어려워졌다. 누군가 회의록을 책임지고 작성하는 고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저 부수적인 장점일 뿐이다.

빈집 홈페이지

남산 언저리 해방촌에 위치한 빈집은 이름마저 비어있는 주인 없는 집이다. 아니, 잠시 스쳐가는 모든 이들이 주인인 집이다. 누구든지 빈집에서 밥을 먹고, 차/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고, 회의하고, 모임을 가지고, 책을 읽고, 토론을 하고, 장기투숙하는 행위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누가 와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늘 변해가는 공간, 빈집이 운영되고 홈페이지는 위키로 만들어져 있다. 빈집을 닮았다는 빈집 홈페이지는 어떻게 생겼을까?

홈페이지하면 으레 생각나는 것이 웹마스터이다. 웹마스터는 홈페이지를 운영/관리/수정하는 사람이다. 홈페이지에 게시물을 올리거나, 덧글을 다는 것 말고, 홈페이지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내용을 대폭 수정하고 싶을 때 웹마스터가 호출된다. 웹마스터는 그런 기술[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빈집 홈페이지는 다르다. 빈집 홈페이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는 공간이고, 구성될 수 있는 공간이다. 홈페이지 첫 화면의 구성을 바꾸고 싶다면, 첫 화면에서 [편집] 버튼을 누르고, 편집을 시작하면 된다. 저장을 누르면, 방금 편집된 내용이 그대로 첫 화면에 나타난다. 빈집에서 하고 싶은 것들, 하고 있는 것들, 이미 해버린 것들을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하고 싶다면, 적절한 장소에 내용을 정리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소들에 노출시키거나, 링크를 걸어줄 수 있다. 적절한 장소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면 된다.

빈집에 주인이 없는 것처럼, 아니 빈집을 드나드는 모두가 빈집의 주인인 것처럼, 빈집 홈페이지의 웹마스터는 이 홈페이지를 드나드는 누구나이다. 백문이 불여일견! 지금 바로 빈집 홈페이지를 둘러보고 웹마스터가 되어보면 어떨까.

Wikileaks

Wikileaks는 비밀리에 행해지는 부당한 행위들, 특히 정부의 독재와 기업의

비리에 관련된 내부문서들을 제보/검증/폭로하기 위한 사이트이다. Wikileaks는 철저하게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공간이며, 제보된 문서의 진위에 대해서 Wikileaks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단체 및 개인]이 검증하는 공간이고, 검증이 완료된 사실들을 대중과 언론에게 폭로하는 공간이다. 당연하게도 Wikileaks는 위키로 만들어져 있다.

2007년 시작된 Wikileaks에 현재까지 폭로된 문서는 백만건이 넘으며, 관타나모 수감자들의 처우에 대한 문건, 영국 노던 록(Nothern Rock) 은행의 파산 위기와 관련된 내부 문서, 최근 중국의 티벳 학살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까지 사회적 파장이 크고 꼭 필요한 문서들을 폭로해왔다. 최근에는 스위스 한 은행의 탈세 및 비리혐의를 폭로했다고 고발을 당해, 도메인이 일시 정지되기도 하였다. 그만큼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가.

Wikileaks가 가능한 것은, 언론과 대중의 신뢰를 받고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은, 즉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폭로 사이트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집단 지성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폭로된 문서는 Wikileaks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및 개인들의 조사 및 토론을 통해 진실성과 정확성, 위변조 가능성 등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은 위키를 통해 가능하고, 진행되고 있다. 폭로문서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토론페이지를 열고,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Wikileaks가 지향하는 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보기관 —사람들로 이루어진 정보기관— 이다.

Wiki Politics

위키는 말뿐인 민주주의에 대한 한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린 정치에 위키를 통해 진정한 참여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시도가 여럿 있다. 아쉽게도 아직 그닥 성공적인 사례는 없는 것 같지만 몇 개의 사이트를 소개한다.

- OpenPolitics <http://openpolitics.ca/tiki-index.php>
- Politics.Wikia http://politics.wikia.com/index.php?title=Main_Page
- PoliticWiki http://politics.wikia.com/index.php?title=Main_Page
- More Perfect
http://www.moreperfect.org/wiki/index.php?title=Main_Page

마무리

여기 소개된 페이지들 말고도 Biopass(<http://biopass.jinbo.net/>), 미디어문화 행동(<http://gomediaction.net/wiki>), 지금보고 있는 이 웹진(http://act.jinbo.net/wiki/index.php/WebZine_ActOn), 그리고 아마도 무수히 존재할 개인 위키 등 많은 곳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위키가 활용되고 있다. 여기 소개된 페이지들을 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올랐다면, 혹은 다음번에 비슷한 페이지들이 필요하게 된다면, 먼저 위키를 떠올려보는 것은 어떨까?!

나도 위키를 맛있게~♪

홍지 |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idiot@jinbo.net

과자나? : 혼란스러운 첫만남

위키를 처음 만났던, 아니 위키란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날은 정확히 2006년 4월 3일. 날짜까지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고? 내가 진보넷에서 상근 활동을 시작한 날이자, 첫 사무국 회의를 하게 된 날이거든. 사람 얼굴도 낯선데, 더욱 더 낯선 것은 회의 때 주고받는 이야기들이었지.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자니,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니까.

이름테면, 언젠가 탈주선이 진보넷 상근 활동가들에게 내린 공지사항 중에는 이런 게 있지. "WWW 및 회원 서버가 자주 죽는데요.(전원이 꺼졌나? 그럼 켜면 되는 거 아니야?) 좀 더 테스트를 해 봐야겠지만,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SSH 스캐닝 공격일 가능성이 있는데,(스캐너도 문제 있나?) Linux Kernel이 버그 현상을 일으켜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이죠.(버그.. 벌레... 컴퓨터에 벌레가 들어갔군.) 두 번째는 Hard Disk나 CPU 쿨러 등의 하드웨어적인 장애일 가능성이요.(그러니까 벌레가 컴퓨터에 들어가서 하드 디스크랑 CPU를 망가뜨린

거야.) 일단 SSH port를 몇 개의 IP만을 제외하고 아예 접근을 막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해보니,(IP에 벌레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컴퓨터에 살충제 뿌려도 되나?) 첫 번째 경우더군요. 진보넷 활동가들이 WWW에 직접 터미널 연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WWW에 들어가려면 브라우저 창을 열어야 하지 않나?) IP를 1-15 사이로 조정하고 저에게 이야기 하면 접속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결론은 문제 생기면 탈주선에게 이야기 하면 된다는 거지?)

컴퓨터라고는 전원 껐다 켜는 방법이란, 웹브라우저 여는 방법 밖에 모르는 내가 첫 사무국 회의에서 저런 외계어를 듣게 되니, 얼마나 당황했겠어? 여하튼 그렇게 해서 처음 만나게 된 외계어 중의 하나가 '위키' 였다. 고백하건데, 난 이게 과자 이름인 줄 알았어. 요즘 인권단체들은 티셔츠가 아니라 과자를 찍어내나 싶었다니까. 진보넷이라는 이름이 적힌 쿠키 이름은 '위키'. 웬지 맛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과자가 아니라. 툴이래. 툴? 아냐... 한국말로 좀 설명해봐. 그래서 달군이 나에게 설명을 해줬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인터넷 상의 문서 편집 툴이라나 뭐라나. 인터넷에는 진보넷, 참세상, 네이버, 다음 같은 홈페이지만 있는 것 아니야? 여하튼 첫 사무국 회의에서의 혼란스러운 첫 만남 이후로 위키는 곧 잊혀졌다. 굳이 쓸 일이 없었거든. 그리고 무적의 '한글 2005'가 있는데, 그런 거 알아서 뭐하나 싶었지. '기술국 오타쿠(?)들이나 쓰라지~' 뭐 이런 생각이었지.

헬~함이 경쟁력? : 모든 이에게 권리를!

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2007년의 새해가 떠오름과 동시에 진보넷의 모든 회

의록은 위키에 기록하기로 했다. 이 무슨 청천벽력인지! '한글2005'가 부족하다면 '한글2007'을 쓰면 되잖아! 하지만, 조직의 결정(?)에 따라 손가락을 부들 부들 떨면서 진보넷의 위키 페이지로 들어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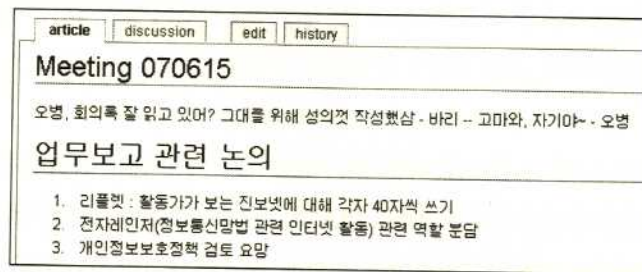
이거 뭐냐? 행~함이 경쟁력인 건가? 보통의 사이트들과 달리 흰 바탕에 글씨만 있는 위키 페이지는, 10여 년 전 인터넷을 처음 접했을 때 보았던 풍경을 떠올리게 하더군. 번쩍 번쩍, 알록달록한 웹페이지들만 보다가 그런 걸 보니 적응이 안 되더군. 게다가 글 쓰는 곳이라는데, 댓글 기능은커녕 게시판도 안 보이고, 무엇보다 글을 쓰려면 '쓰기' 버튼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었어.

위키에서 '쓰기' 기능은 'edit(편집)'라고 하더라고. 요 글 밑에도 보면 조그맣게 '편집'이라고 써진 게 보이지? 보통 '편집'하면, 편집 업무를 맡은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물어봤지? "코디는 달군이잖아. 편집은 코디만 하는 거 아니야? 난 그냥 안전 보고만 쓰려고 하는데? 쓰기 버튼 좀 만들어봐...ㄱ.ㄱ" 그런데 그게 아니라.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회의가 시작되는 거라냐? 이걸 또 무슨 소리?

그런데 위키에서 회의록을 정리하면서부터, 조용한 회의는 시끌벅적한 회의가 되었어. 이전에는 항상 "나는 지난 주에 무슨 일을 했고,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을 할 것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밖에 하지 못했어. 논의는 각자의 보고 중에 특 특 튀어나오는 식이었지. 논의해야 할 안건들은 회의를 준비하는 사람이 정리해야만 알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전지전능한 신도 아니니, 항상 어떤 논의는 빠지기도 하는 일이 생겼거든. 무엇보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논의에 적응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

하지만, 위키에서는 회의록은 공유되고, 공개되지. 그래서 누구든 회의 전에

"이 논의를 해봐요~"라고 미리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어. 회의 시간 중에 논의가 덜컥 시작되지 않으니, 회의에 배제되는 사람도 없었지. 물론 '보고'가 아닌 '논의'에 집중이 되면서 회의 시간이 조금 길어지긴 했지만 그 시간이 지겹지 않게 되었어. 내가 할 말을 미리 생각할 수 있으니까. 게다가 모든 사람의 취향이 반영되는 회의록은 한글로 편집된 딱딱한 회의록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올라오게 되었지. 이를테면, 진보넷의 회의록에는 이런 천인공노할 염장 지르기도 기록이 되지!



행~하게만 보이는 위키는, '시삽(Sysop, System Operator)' 또는 '편집장'이라는 직함을 단 개인만이 독점하는 '편집'의 권한을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면서 실은 그 어떤 게시판보다 시끌벅적한 공간이 될 수 있는 거였다는!

사방팔방 중형무진 : 공간 창조와 미학

"기술국 오타쿠들의 음모야!"라고 절규하며 시작한 위키는,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것만큼이나 재미있어졌지. 회의록 작성을 할 때는 늘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 봐야지'라면서 회의록에 이것저것 기록해놨. '!', '*', '# 등을 이용하여 문서를 편집할 때는 내가 꼭 프로그래머가 된 것 같은 기분(?)도 들어서 짜릿하기까지 해. 하지만, 위키를 사용하며 알게 된 가장 큰 재미는 내가 직접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야.

생각해 봐. 우리는 언제나 만들어진 공간에만 있었어. 누군가가 관리하는 게시판에서 관리의 편의를 위해 언제나 일렬종대로 1, 2, 3의 번호표를 받고 뻗뻗하게 서 있었지.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들은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정리되었거든. 옛날에 쓴 글이라도 찾아보려면 인내에 인내를 거듭하며 '이전 페이지'를 클릭하게 되지. 그래서 WWW(World Wide Web)이 사용자들의 '연상'에 따라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바다'라는 말을 들어도 그다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 세상에 번호표가 붙여지고 구역이 나뉘진 바다가 어디 있어? 게다가 우리의 뇌는 1, 2, 3이라는 번호를 부여하며, 카테고리를 생성하면서 연상하지는 않잖아? 위키에서 쿠키로까지 생각이 튀는 게 사람의 뇌인데 말이야.

그런데 위키는 말 그대로 내 머릿속의 '연상'에 따라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야. 편집의 권한이 누구에게나 있으니, 누구나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지. 공간 창조의 비법은 간단해. 복잡한 태그(tag) 따윈 하나도 없어. 위키 편집화면에 대괄호(Ⓜ)만 적으면 세상에 하나뿐인 공간이 만들어지지.

줄 세우기 좋아하는 사람의 눈에는 사방팔방 종횡무진의 정신없는 공간으로 비춰질 수 있어. 하지만, 그 사람은 창조의 자유로움이 만들어내는 규칙인 '자유'를 모르는 사람이야. 위키피디아를 생각해봐. 네이버 지식in에서는 '여성부'에 대해 물어보면 "폐미 암개", "여성부 폭파"란 대답이 나오지만, 위키피디아에서는 그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그 곳에 속이 꽉찬 수많은 정보를 쌓아두고, 또 다른 알찬 정보와 연결해 놓지. 말 그대로 '집단지성'인 거야! 그래서 위키피디아는 이제 브리태니커 백과사전보다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신뢰를 쌓아가고 있어. 창조가 만들어내는 자유의 규칙은 이렇게나 대단해!

지난 가을에 나는 한-EU FTA에 대해 글을 쓰게 되었는데, 그 때도 위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 구글링을 하면 이게 도대체 내가 쓸 수 있는 정보인지, 아닌지 헛갈려. 내 머리 속의 연상에 따라 정보를 찾기도 힘들지. 실 새 없이 검색어를 입력해야 하거든. 하지만, 위키에서는 문서에 있는 단어들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페이지를 따라가면 될 뿐이야. 거기에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대괄호 하나로 내가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놓으면 될 것이고, 그렇게 추가된 정보는 세상의 또 다른 누군가가 유용하게 쓸 수 있겠지?

그런데 '창조', '자유로움', '자유' 등 이런 말에 또 생래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위키에 있는 정보의 질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게 되니까, 요즘은 이런 비판을 한다고 해. "위키는 지나치게 진보적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컨서버피디아야. 설립 취지는 지나치게 반미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위키피디아에 미국인들이 물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나. 사람들이 자유롭게 항목을 작성하고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위키피디아와 같지만, '삭제'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편집자가 대부분 보수적 학계 출신이라는 점이 다르지. 컨서버피디아에 돌아다니는 정보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대. 지구온난화는 보편적이지 않은 하나의 과학 이론에 불과하다., 공룡은 천지창조가 끝난 6일째인 6000년 전에 탄생했다. 등등.

(참고 :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7&no=155361>)

사각 사각 맛있다, 위키

이제 나도 위키를 사용하게 된 지 1년이 지났어. 처음에는 공포감 비슷하게 가지고 마주한 위키였는데, 이제는 매일 매일 위키를 사용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참여하는 정보공유연대IPLeft에도 위키를 제안했지. 내가 잘못 입력한 태그를 다른 사람들이 수정도 해주고, 내가 빠트린 내용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충해

주면서 점점 풍성해지는 것을 보면, 이 따사로운 봄날 햇볕을 듬뿍 받으면서
연두 빛 잎을 무럭무럭 키워나가는 나무들, 꽃들을 보는 기분이야.

이제 겨우 시작인 진보넷 위키도 언젠가는 알차게 자라서 위키피디아 만큼
이나 커다란 열매가 되어 사람들이 그 맛을 즐길 수 있게 될 거라 생각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글에서부터 벌써 그 열매의 맛이 느껴지지 않아? 당장 이 글
밑에 달린 '편집' 버튼을 누르고 시작해 보라고! 무척 맛있을 거야.

CCTV님께서서

보고계셔

174 보이지 않는 시선, 관대함이 없는 감옥 / 김승욱

179 CCTV 천지 세상... 정말 안전할까 / 바리

186 CCTV 시스템, 이대로는 안된다 / 토리

194 감시카메라, 나에게서는 고통의 이름이다 / 최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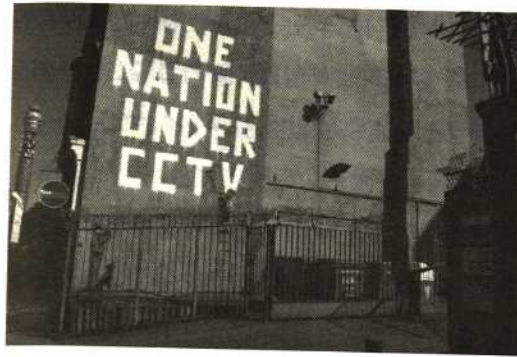
보이지 않는 시선, 관대함이 없는 감옥

김승욱 |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saakan99@jinbo.net

작년에 미국에서 한 한국계 미국인에 의해 발생한 끔찍한 총기난사 사건이 있었다. 사건 직 후 한국 사람들은 미국인들이 한국인들을 바라보는 생각이 안 좋아질까봐 당황스러워 했었고, 주미대사는 사과의 의미에서 금식을 제안하기 까지 했었다. 곧이어 언론은 그가 사실상 미국사회에 의해 길러졌다면 미국 내 한인사회와 한국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개인적 원인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회적 원인만큼은 미국에 있으므로, 한국사회 혹은 미국 내 한인사회의 책임은 없다는 이 논리는 범죄에 사회적 원인과 개인적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즉, 외부의 원인과 개인의 자유가 존재한다.

자유와 책임

우리는 자유가 가능할 때, 즉 누군가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윤리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외부의 원인을 따르는 것이고, 어디서부터가 자유의지에 따라



시작된 것일까. 예를 들면, 범죄의 원인분석에 있어서 개인적 원인과 사회적 원인의 경계는 늘 모호하다. 둘은 강하게 섞여있다. 모든 원인이 사회적인 것이라면 개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다. 반면에 개인

의 책임만을 추궁한다면, 처벌은 공허하다. 사회는 또 다른 범죄 행위자를 만들어 낼 것이다. 우리는 사회적 원인을 괄호에 넣을 때 개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개인의 자유의지를 괄호에 넣을 때 사회적 원인을 볼 수 있게 된다. 근데 자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자유란 자기원인적인 것이다. 원인이 밖에서 오지 않고 내재되어 있는 것이 자유다. 그러나 자유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자유에는 능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무엇인가를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고 치자. 그것이 정말 내적 자아로부터 오는 욕망일까? 그것은 타자의 욕망일 뿐이다. 아이들이 장난감—예를 들어 다마고짜—을 갖고 싶어하는 이유는, 스스로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욕망이 자유일 리 없다. 다른 욕망들도 마찬가지이다. 모두들 “소비의 사회”에서 광고가 시키는 대로 필요 이상의 물건들을 소비하고 소유하며 살아간다. 아마 광고가 없다고 해도, 진정으로 욕망하는 것, 내면의 법칙이 명령하는 것을 발견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자유에는 진정 능력이 필요하고 그것은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책임 있는 개인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자유를 발견하고 행하게 하는 끊임없는 연습이다. 자유연습은 “진짜로 원하는 것”을 찾는 것, 내면의 법칙을 발

견하는 것, 내적 자아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는 것이다. 자유연습은 동시에 책임연습이다. 자유를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다. 거꾸로 자유가 박탈된 자에게서 책임의식을 찾을 수는 없다.

범죄가 발생하면 우리는 그 행위자의 자유를 박탈한다. 동시에 교정을 시도한다. 법정에서는 그가 저지른 범죄의 교환가치와 그의 교정이 이루어질 충분한 시간을 염두 해서 그가 살아야 할 징역의 양을 정한다. 감옥의 목적은 형벌로서의 자유의 박탈과 다시 사회에 적합한 인간형을 만들어내는 교정에 있다. 그러나 자유를 박탈하는 것과 그를 사회를 다시 살아갈 책임 있는 개인으로 길러내는 것 사이에는 심각한 모순이 있다. 책임은 자유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수인은 자유를 연습하는 대신에, 완벽한 통제를 연습한다. 철저한 시간표, 말하는 방법,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따위가 주어지고, 선택은 존재하지 않는다. 수인은 한 번도 자유를 그러므로 책임을, 연습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자유를 박탈하면서 그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다. 범죄자로 검거되는 사람들 중 40%는 감옥에서 온 사람들이다. 최초의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감옥은 실패했다. 감옥은 범죄 행위자를 재생산하는 공간이다.

감옥과 CCTV

감옥 밖에서도 비슷한 모순이 강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CCTV인데, 한국에서는 인구 20명당 1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최근에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정부[경찰]는 발 빠르게 CCTV 설치의 확대를 대책으로 들고 나왔다. 경찰청은 공원과 놀이터에



쓰레기통 CCTV

CCTV를 설치하겠다고 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까지 전국 초중고교의 70%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CCTV는 타자의 시선이고, 강제로서 기능한다. “여기에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타자[기계]의 눈이 당신의 행위를 기록하고 있으니, 법에 어긋나는 행위는 하지 마시오.”라고 그 공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길거리 쓰레기통의 입구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CCTV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통 안으로 제대로 버리지 않은 상태로 자리를 뜨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국 학교의 70%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학교에서의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에 타자의 시선을 도입[강제]함으로써, 개인의 선택을 바꾸고자 하는 욕망이다. CCTV는 행위 이전의 모든 사회적 원인과 개인의지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성폭력을 저지를 것이라고 치자. 왜 그렇게 됐을까? 그의 가정환경은 어떠한가? 그의 아버지는 가부장적일까? 그는 어떤 교육을 받아 왔을까? 그가 보고 듣는 미디어는 어떤 내용들일까? 여성과 남성의 하는 일이 고정[차별]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광고와 드라마만을 보며 자라지는 않았을까? 성적 욕망만을 환타지처럼 주입받지는 않았을까? 여성을 먹을 것에 비유하는 라디오 방송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가 속한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어떤 예술가가 “이 갤러리에서 창녀를 찾아내시면 돈을 드립니다”라고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사회는 아니었을까? 성희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재선될 수 있는 사회는 아니었을까? 그리고 결국, 개인의 선택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어쨌든, 이 모든 원인을 다 따지면 복잡하니까 잠시 접어두고, 그가 결정해야 될 순간에 타자의 시선을 도입해서 다른 선택을 잠시 강제하는 것이 바로 CCTV다.

CCTV는 감옥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유의 연습을 방조하는 대신에, 내면의

법칙을 따를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자아를 길러낼 가능성을 만드는 대신에, 자유를 박탈한다. 그리하여 감옥이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는 똑같은 실패를 예상할 수 있다. 행위자를 대상화하고, 하나의 강력한 원인만을 임시처방하는 것은 또 다시 감옥을 불러낸다. 학교에서, CCTV와 함께 자라난 학생은 어떤 사람이 될까? 바꿔 말하면, 자유를 연습하는 대신에 타자의 시선을 의식하는 연습을 하며 자란 학생은 어떤 사람이 될까? 이것은 단순히 악취 위에 향수를 뿌리는 처방이 아니다. 그것은 악취의 근원을 또 다른 오물로 뒤덮는 실험이다.

재생산의 끊임없는 악순환은 이미 시작되었고, 확대되고 있다. 그리하여 감옥이 부족해지자 사회 전체를 감옥화되고 있다. CCTV가 감옥을 능가하는 점이 있다면, 기록된 영상을 끊임없이 미디어에 노출시킴으로써, 국민적 관음증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범죄 행위자의 확대재생산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불평등한 시선의 교환으로 인한 감시의 내면화는 임시처방을 영구적인 것으로 만든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어”라는 잠재의식이면 자유[연습]을 박탈하기에 충분하다. 우리 사회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

푸코는 감옥이 다소간 엄격한 병영, 관대함이 없는 학교, 암담한 일터와 같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것들과 어떤 질적 차이도 없다고 했다. 무제한적 CCTV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푸코의 비유를 다음과 같이 뒤집어야 할지도 모른다: “학교, 공원, 놀이터, 그리고 사회 전체는 다소간 엄격하고, 관대함이 없고, 암담한 감옥과 같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것과 어떤 질적 차이도 없다”고.

CCTV님께서 보고 계셔

CCTV 천지 세상... 정말 안전할까

바리 |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della@jinbo.net

정부가 잇따라 CCTV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지난 3월 26일 경찰청이 「아동·부녀자 실종사건 총력대응 체제」의 일환으로 놀이터·공원에까지 CCTV를 확대 설치하겠다고 밝히는데 이어, 5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폭력 대책으로 2010년까지 전국 초중고교의 70%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5월 19일에는 국토해양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등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고, 서울시는 서울 지하철·지하철역 모든 화장실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CCTV는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이다. 공공기관 CCTV가 전국적으로 이미 13만 대가 깔려 있지만, CCTV는 여전히 민생 치안 문제의 가장 유력한, 때로는 유일한 해법이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CCTV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CCTV가 촘촘히 깔려 있는 세상은 정말 안전한 것일까. 일단 공공기관 CCTV를 시비의 대상으로 삼아 보자.

이번에 서울시가 지하철·지하철역 화장실에 CCTV를 달기로 한 것은 여



성 3명 중 1명이 심야시간 화장실 이용시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한다. 기사에 따르면, 남자가 들어갈 수 없는 여자화장실 13.9%이 '치안 사각지대' 라고 한다. 그렇다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을 CCTV로는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치안'의 개념이 사회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국가가 국민의 모든 생활을 늘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인가?

모든 곳을 감시하는 '치안'

2002년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가 CCTV 5대를 시범 설치한 이래로 공공기관들은 앞다투어 CCTV를 도입하였고, 오늘날 대한민국 공공기관에 설치된 CCTV는 모두 13여만 대에 이른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모든 CCTV는 최근까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이 설치 운영되어 왔었다. 그야말로 무법적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CCTV에 대하여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수많은 인권단체들의 요구와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거쳐, 2007년 드디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CCTV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관련법을 시행 6개월째를 맞아 우리가 파악한 공공기관 CCTV 운영 실태는 충격적이다. 지난 2008년 2월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된 <공공기관 CCTV 관리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공공기관 CCTV가 몰래 감시를 자행하고 있었다. 대개 줌, 회전 기능이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부 CCTV의 경우 심지어 당사자 모르게 음성 녹음을 하고 있었다. 음성녹음은 명백한 불법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다. 안내판 설치율도 64%에 그쳤다. 14개 기관 CCTV 12,778대만을 조사한 결과가 이 정도이니, 전체적인 실태는 더욱 심각할 것이다.

몇 개 항목 되지도 않는 법률 지키기가 그처럼 어렵다니, 일선 공공기관이나 경찰의 정보인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만 하다. 이번에 밝혀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전체 공공기관 CCTV의 실태가 국민 앞에 투명하게 다 밝혀져야 한다.

조사를 시행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공공기관 CCTV의 불법적인 실태에 대해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번에 정보공개가 될 때까지 쉬쉬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충격적인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란 것도 대개 '권고'에 그치고 있다. 4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까지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게다가 보고서의 말미에는 그나마 현행 법률의 규제조차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비추고 있다. 이 기관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알리바이가 되어줄 바에야, 활동을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인권시민단체들이 오랫동안 주장해왔듯이 특정 정부 부처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필요한 이유를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공공기관들은 CCTV 촬영본을 다른 기관이 요청할 때마다 마구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촬영본이야말로 개인들의 사생활과 화상 정보가 담긴 소중한 기록일 텐데 대장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니 아연할 따름이다. 주차단속용으로 설치된 CCTV가 집회 채증 용으로 제공된다든지 법률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촬영본 제공은 즉각 중지되어야 하고,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로 우리는 공공기관 CCTV 규제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잘 알게 되었다. 이는 일차적으로 현행 법률상 공공기관 CCTV 규제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 CCTV가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초 설치될 때부터 목적 외 용도로 설치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해야 하는데, 이 법률은 겨우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모호한 이유로 사실상 대부분의 공공기관 CCTV를 용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제멋대로 촬영하고 사용하고 제공해도 아무도 제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최소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준으로는 법적인 보호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제멋대로 사용되는 공공기관 CCTV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공공영역에서 사회적 약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사실이다. 꾸준히 계속되고 있는 경찰력의 강화와 첨단감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우리 사회는 점점 위험해지고만 있는 것인가? 진정 위험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위험의 발생 요인, 그 구조적인 원인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2001년 11월 24일 <신자유주의와 민주법학>을 주제로 개최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에서 이계수 교수는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경찰국가의 강화”라는 글에서 이렇게 지적하였다.

... 타인의 자유를 제약하고 유린하는 것을 능력의 발휘로 정당화하는 신자유주의의 냉혹한 시장논리 때문에 도시에서 '일상적'인 범죄와 일탈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 신자유주의로 인한 빈곤의 세계화, 경제적 격차의 증대가 가져오는 계층간의 소통단절, 한 사회를 묶어주는 공동규범의 소멸이 위험과 범죄의 원천이라는 사실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와 사회를 만드는 것이며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얻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 일상적인 사회규범을 대신할 법적 규범을 정비하고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각국 경찰법제와 사회법제의 변화를 추적해보면 예외 없이 법치 국가의 위기 (=경찰권한, 경찰의 집행력을 확대·강화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새로운 형태의 경찰국가의 득세)를 확인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냉혹한 시장논리와 빈곤의 증대, 공동체의 파괴 때문에 우리 사회는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 즉, 치안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CCTV와 같은 감시 권력의 확대를 피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치안 위기의 사회구조적 원인과 해법을 외면한 결과이다. 아니, 때로는 그 구조적 문제를 은폐하는 역할을 한다. 목숨을 앗아가는 범죄가 횡행하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개인은 불시에 나타날지 모르는 낯선 사람을 매일매일 경계해야 하는 처지이다.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낯선 사람을 경계하도록 하는 풍토는 '외국인 근로자'와 같은 '타자'의 범죄에 특별히 주목한다.

이때 CCTV는 공포스럽고 혐오스런 타인을 주시하여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 고마운 국가권력의 화신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으로 하나둘씩 늘어난 CCTV는, 결국 경찰력의 강화로 귀결될 것이다. 신자유주의적인 경찰국가가 등장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리고 경찰은 이렇게 강화된 권력을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민중을 감시하고 탄압하는 데 마음껏 휘두른다. 이번 광우병 괴담 수사에서 볼 수 있었던듯이.

필요한 것은 경찰력의 강화가 아니라 경찰이 불필요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 아니겠는가. 사회적 약자가 혼자 다녀도 안전한 사회, 모두가 케어하는 사회. 경찰이 아닌 공동체가 힘을 발휘하는 사회. 그러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몫쓸 체제에 대해서 반드시 성찰해 보아야 한다.

현실 정책적인 관점에서 CCTV 선호는 큰 문제가 있다. 전자 장비의 객관성, 무결성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그 이외의 대안을 모두 배제해 버린다는 데 있다. 지하철 객차마다 2대씩 CCTV를 도배하는 것보다는, 지하철 1인 탑승이나 무인화를 재고하는 것이 안전하며, CCTV만 남겨놓고 보안인력이 철수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순찰을 하는 것이 문화유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는 길이다. 특히 CCTV와 같은 대량의 개인정보 수집장치는 그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고 유출하고 조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다.

감시는 복종을 원한다

무엇보다, '감시'가 '권력'이 되는 사회는 끔찍하다. 감시는 단지 쳐다보는 것이 아니다. 감시는 조금 기분이 나쁘지만 참아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감시는, 궁극적으로 감시당하는 사람의 행동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텔레스크린도, 벤담이 설계한 <원형 감옥>도 감시 대상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들이었다. 빅브라더가 원하는 충청심을 가지도록, 간수가 원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CCTV를 설치한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모두 복종을 하는 사회. 과연 인권이 있고 민주주의가 있을까?

CCTV 시스템, 이대로는 안된다

- 해외 CCTV 규제 제도 분석

토리 | 진보네트워크센터 자원활동가 torirun@jinbo.net

최근 한국에서는 민간영역, 공공영역 가릴 것 없이 CCTV가 무절제하게 확대 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CCTV는 설치와 동시에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 침해를 막아내기 위한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시민들의 사생활침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법과 시스템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여전히 철저한 '준비'와 '운영' 보다는 '설치'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큰 상황이다. 이에 해외의 CCTV 지침서 내용 중 한국 사회가 고민해야 할,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한다.

1. 호주 'North South Wales 정부 CCTV 확립과 수행을 위한 정책 보고서 및 지침서' (이하 호주NSW정부 CCTV 지침서)

호주 NSW정부 CCTV 지침서 관련한 내용을 검토해보았다. 대체로 다른 내용은 영국과 미국의 CCTV 가이드라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부각되는 점은

'지역사회와의 협의'를 중요시하며, CCTV 시스템에 대한 '평가시스템'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는 내용이었다. 이에 간략하게 호주 NSW정부 CCTV 지침서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 몇 가지를 짚고자 한다.

1) 지역사회와의 협의 중점

공공CCTV 시스템의 도입을 고려하거나 그 범위를 늘리고자 할 때, 각 기관에서 생각해야 할 과제는 효율적인 지역사회와의 의논 전략을 통해서이다. 의논은 시스템이 지역에 필요와 상황들을 뒷받침 해줄 것이고 시스템의 가동은 지역사회의 후원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다.

〈1.2 지역사회와의 협의〉중에서

CCTV 설치 목표가 범죄예방을 통한 보안과 안전을 개선하는 것일 때에 지역사회는 그것에 대한 손해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예산 부담과 프라이버시 침해 등. 그러므로 지역사회는 CCTV의 장단점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논의하여야 한다.

가이드로써 지역사회는 이점들에 관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제안된 지역의 감시 / 현 범죄 상황 / 지역에 대한 대중의견 / 프로그램의 목표물 (지역사회에 실용적인 프로그램 계획, 다른 말로 가해의 종류/행동/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CCTV는 모든 범죄예방에 대책으로 미화되어서는 안된다.)

〈4.1 논의단계들〉중에서

CCTV는 모두 알다시피, 설치와 동시에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시스템

이다. 이에 당연히 CCTV시스템이 존재하는 지역사회에 시민들과 협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최근 2008년, 행정안전부가 자체 진행한 '공공기관 CCTV 관리실태 조사 결과'에서 나왔다시피 공공기관 CCTV 설치 시 기본적인 의견수렴 '미실시' 기관이 다수 존재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불법적인 행위임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또한 한국사회에서는 CCTV설치만을 통해 범죄율을 낮추려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을 보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호주사례에서 보듯이, CCTV설치를 단순히 시민들에게 의견 수렴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CCTV가 모든 범죄예방에 대책으로 미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각인함과 동시에, 종합적인 범죄예방에 대한 대책수립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고민해야 할 내용임에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평가 시스템 확립

목표를 달성하는 CCTV의 유효성 정도를 정하기 위해 감시 및 평가 계획을 만들어 구현한다. 6개월의 시험기간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평가한 후, 최소한 12개월마다 CCTV가 계속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모든 평가는 CCTV운영이 이런 효과를 갖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시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를 치환할 것인지 조사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이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적절한 평가 전문가로 독립적인 자문단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17. 감시 및 평가〉 중에서

또한 호주에서는 철저한 감시 및 평가계획을 만들어 CCTV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CCTV운영이 실제로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실질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허나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실태 조사'는 전체 기관에 대한 조사도 아닌 표본 조사 뿐이며, CCTV시스템이 목적인 바에 맞게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이 제도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3) 범죄혐의가 명백한 자 외 추적, 감시 용도 운용금지

CCTV 감시는 절대로 범죄에 연루가 되어있지 않은 사람들을 감시나 추적하는데 쓰여선 안 된다.

〈정책보고서〉 중

호주 NSW정부 CCTV 지침서에는 CCTV감시에 범죄가 연루 되어있지 않은 사람에 대한 감시나 추적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는 공공, 민간 영역을 통틀어 이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서술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추가되어 CCTV시스템이 모든 시민을 '범죄용의자'로 규정하는 감시를 막아야 한다.

2 캐나다 비디오감시기이드라인

CCTV, 최종적 수단으로 사용

비디오감시는 현존하는 실질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만 설치되어야 함. 비디오감시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 없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캐나다 CCTV가이드라인

호주와 크게 내용이 다르지 않으나, CCTV감시가 프라이버시 침해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 없을 때 예외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캐나다 사례는 주목해야 할 점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다수의 CCTV설치가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행정편의적으로 늘리는 것에 재고를 해야 할 것이 분명하다.

3. 영국 CCTV 카메라 운용에 관한 실행규약

1) CCTV 운용시간에 대한 제약

실시간 녹화를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또는 어떠한 행위나 특정한 상황에 취해야 할 행동을 평가해야 한다.

- 이미지의 화질, 표준, 12번

영국사례에서 보듯이, 실제 범죄가 일어나는 시간대를 면밀하게 점검하여 24시간 녹화를 할 필요가 없는 곳에서는 특정한 시간대만 녹화하는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이다. 주로 사람이 낮에 많이 상주하는 거리 같은 경우에는 낮시간대가 아닌, 밤시간대만 CCTV시스템을 가동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생활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2) 녹화된 이미지의 엄격한 제한

녹화된 이미지는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매체나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없다.

-제 3자의 이미지 접근 및 공개, 표준, 6번

녹화된 이미지에 대한 공개는 철저히 제한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CCTV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관에서 자의적 판단으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보고되었다. 또한 해당 정보제공에 대한 문서기록조차 없다는 것은 얼마나 허술하게 CCTV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 'CCTV개인영상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또한 '공공의 목적'이라는 말로 상시적인 정보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임에 틀림없다.

4. 마치며

실제 정리한 내용은 초벌적이고 부분적이다. 분석한 사례들도 호주, 영국, 미국의 가이드라인이며, 해외의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대한 내용도 함께 분석되지 못했다. 하지만 해외사례를 잠깐만 보더라도, 한국의 상황과는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CCTV는 '설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 그리고 주민과의 일회적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닌, 상시적 통로를 만들어야 하며, CCTV 시스템에 대한 철저하고 주기적인 평가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한국정부도 '설치' 위주의 정책에서 종합적인 '계획, 관리, 평가'의 정책으로 하루라도 빨리 변화되기를 바란다.

	영국	캐나다	호주	한국	
				공공	민간
근거법령	정보보호법	프라이버시법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2007.5개정) → CCTV관련 조항 신설	없음
가이드라인명	CCTV 카메라의 운용을 위한 실행규약 (2000.7)	경찰 및 법집행기관에 의한 공공장소 비디오감시의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2006.3)	공공장소에서의 CCTV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정책선언 및 가이드라인 (2002.12)	법률적 보호	CCTV개인영상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2006.10)
적용범위	직장내 근로자 감시를 위한 시설, 가정용 보안장치, 언론·예술·문학 목적의 카메라 이용을 제외한 모든 감시용 CCTV → 공공·민간부문	도로·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경찰과 같은 법집행기관이 설치한 비디오 감시장치 → 공공부문	철도·버스·주차장·도로 등 공공장소에 지방의회 또는 교통담당기관이 설치한 CCTV(소평물, 영화관, 대학캠퍼스 등 제외) → 공공부문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예방 및 증거확보, 시설안전및화재 예방, 출입통제, 아동의보호
설치 장소	설치목적 범위를 벗어난 지역은 촬영금지	샤워실, 화장실, 탈의실 등 설치 금지	우범지역, ATM 및 은행, 버스 및 택시 정류소, 주차장, 기차역, 공공화장실, 전화부스 등 지역의 공공시설, 노약자 위험 지역 등에 설치	제한 없음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이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장소에는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 금지
고지의무	감시장치 설치 사실, 감시 책임자의 신원, 감시목적, 문의사항을 위한 연락처 등을 포함한 표지판 설치	감시장치 설치 사실, 감시업무 책임자 및 프라이버시 보호 책임자, 연락처 등을 포함한 계시판을 설치	CCTV 운영자, 작동 시간·불만사항이나 문의사항을 전화번호 등을 담은 표지판 설치	CCTV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등을 담은 표지판 설치	CCTV 설치근거, 목적, 설치대수와 위치, 촬영범위, 회전과 zoom기능,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등을 담은 표지판 설치

	영국	캐나다	호주	한국	
				공공	민간
절차사항	없음	설치 이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	설치 이전에 지역사회와 협의하고 CCTV 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함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따른 공청회 절차를 거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설치	제한없음
보존기간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영상정보의 보관 금지(부득이한 경우 접근제어장치를 마련한 안전한 장소에 보관)	목적달성시 파기 (보유기간 제한 원칙 준수)	목적달성시 파기	목적달성시 파기	수집후 30일 이내에 파기 또는 삭제(법령, 수사나 재판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제외)
제재 조치	위반 시 시정명령 조치 시정명령 불이행시 법원에 제소(최대 5,000 파운드까지 벌금 부과 가능)	프라이버시법 위반에 해당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자체 내부조사 실시 후 행정법원이 사법심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자체 내부조사 실시 후 행정법원이 사법심사	해당 개인영상정보주체에 개선요청
평가시스템	CCTV운영자 연1회 정기적인 평가 실시 및 그 결과 공포 규정	제3의 독립기구에 의해 정기적으로 감시 속적인 활용여부에 대한 필요성도 정기적 검토	지방의회가 지침의 준수여부에 대해 정기적인 감사실시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할 때 안전 상태조사를 진행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
담당기관	정보커미셔너	연방 프라이버시커미셔너	호주 New South Wales 주정부	행정안전부	정보통신부

국내외 CCTV 관련 규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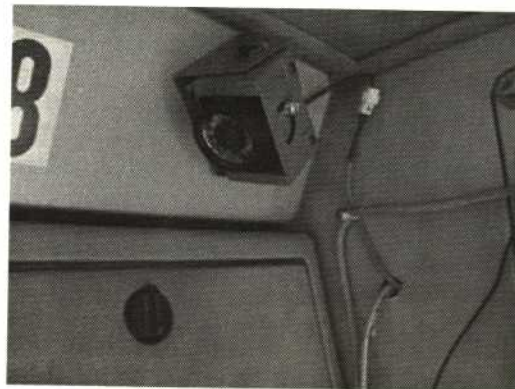
감시카메라, 나에게는 고통의 이름이다

최태일 | 대구 버스노동자협회의 부의장

2003년 2월 25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내가 운행하던 시내버스에 회사 사장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

그러한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나는 교대하면서 우연히 적외선 감지센스가 부착된 고성능 감시카메라를 보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거수일투족이 철저히 감시당해 온 것에 대한 배신감과 어처구니 없음에 치가 떨렸다. 혈압이 급상승하고 호흡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온몸이 깡통 찌그러뜨리는 것과 같은 신체적 변화가 생겼다. 회사의 교묘하고 치밀한 작태에 불안과 공포감을 느꼈고 나를 그렇게 만든 사장을 때려죽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화를 제대로 풀지 못 하고 혼자 마음 아파하니 너무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고 온몸이 물매를 두들겨 맞은 것 같은 고통이 뒤따랐다.

결국 2003년 2월 27일부터 2004년 5월 4일까지 정신과에서 급성스트레스 증후군과 적응장애로 진단받고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병행하면서 산재요양치료를 하였다.



운전석 머리위에 있는 감시 카메라



카메라 옆 실시간 위성추적장치(G.P.S)

지금 생각해도 당시에 주치의를 잘 만난 것 같다. 치료 중에도 마음속에 넣어두지 말고 자꾸 풀어내고 싸워야 된다고 항상 나에게 주문을 하였고 내가 옳은 일이라고 믿는 것에는 집회나 시위에 가서 마음 속의 응어리를 풀어내라는 처방을 하여 주었다. 물론 회사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 요양환자가 집회에 참석하고 시위하고 하니 피병이라고 온통 뒤집어졌다. 내가 몸이 나아지는 것 만큼 그들은 나를 피병이라고 주장하며 주치의의 요양종료하도록 압박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나도 느낄 수 있었다.

당했던 일만 생각하면 통증이 계속되었고 치료하면서도 나 자신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자괴감에 힘들었다. 그래도 나와 사랑하는 아이들, 우리 가정을 위해서라도 정면으로 모든 고통들과 부딪치기로 마음을 먹고 현장으로 복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감시는 다른 방법으로 계속되었지만 애써 무시하면서 힘겹게 견뎌 왔다.

그런데 2008년 4월부터 대구 시내버스 전체에 차 한 대당 감시카메라가 네 대씩이나 설치되고 음성녹음까지 된다고 한다. 다시 혈압이 상승하고 머리가 아프고 인간 존엄성을 포기하도록 강요당하는 현실이 너무 서글프고 싫다.

왼쪽 뒷머리가 부분적으로 묵직하게 두통이 항시 따른다. 가끔씩은 관자놀이 부분이 전기 감전될때의 고통도 있다. 어떤 때는 머리위 뚜껑이 확 열리는 느낌일 때도 있다. 내 머리를 벨트로 꽉 조이는 괴로움도 있다.

내가 아는 동료 한사람은 대구시내버스 경북교통 소속이었는데, 몰래카메라의 충격과 배신감, 불안 등으로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막혀 산재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몇년 동안 치료받고 노력하였음에도 치유가 되지않아 장애를 안고 결국엔 버스일터를 떠나 연락이 단절된 상태이다.

운전석 거울옆 B.M.S로는 대구시경찰청센터에서 관할하는 전체도로에서 내가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상황이 번호 한 점으로 표시된다. 내 점을 클릭하면 실시간으로 내 운행상황의 모든 것이 확인된다. 감시카메라로 촬영당한 나의 숨쉬는 모습 까지도.



승객용이다. 차 ~ 암 친절한 시내버스 감시시설이다.



앞 문으로 타는 승객들 뒷문으로 내리는 승객들 버스 옆의 모든 것을 영상화한다.



4개의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자료를 기록하고 전송하는 하드웨어 보호박스가 있다. 대구시의 로고가 선명하게 있는데도 저희 놈들은 모르새라나.

감시카메라 관리회사직원이 어제(5월19일13시경) 내가 일하는 차에 와서 사진촬영을 하기에 다른 동료와 함께 물어보니 음성녹음은 물론이고 모든 소리가 다 녹음된다고 하였다. 증거의 정확성을 위해 기록한다.

@ ActOn 0110

촛불만남

미디어

- 200 촛불시위와 온라인 광장 아고라, 다시 미디어 / 탈주선
- 207 무너진 키치(Kitch)의 왕국 / 홍지
- 213 아고라를 진압하라? / 바리
- 218 미디어를 가지고 놀자, 괴물과 함께 자라자 / 달군

촛불시위와 온라인 광장 아고라. 다시 미디어

탈주선 |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hwangkm@jinbo.net

다시금 촛불이 타오르고 있다. 무수히 많은 언론과 지식인들이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직접민주주의의 위대함에 대해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다. 쪽팔리고 빈약한 언술로 차마 손가락 하나 더 얹을 생각은 없지만, 좀 더 나아간 이야기를 하기 위해 고루하고 식상하지만 다시금 중언부언하는 것에 대해 양해 부탁 드린다.

1.

2002년 효순·미선이 미군장갑차에 의한 사망 사건 당시에도 촛불시위를 주도한 것은 여중생들이었다. 그들은 당시에도 카페나 싸이월드에서 사진을 퍼 나르며, 매일 저녁 광화문을 촛불로 밝혔다. 당시 온라인 광장의 중심은 오마이뉴스 등의 인터넷언론이었다. 2004년 노무현 탄핵반대 시위 때도 마찬가지였다. 2008년 소고기협상 반대 촛불시위도 중고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에서부터 시작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현장에서 더욱 의외의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 광화문에서 펼쳐지는 다음 아고라 깃발이다.

2002년 즈음의 온라인 뉴스가 대중들의 참여 공간으로 각광받은 것도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실패에 기인한 것이다. 당시의 정당구조 역시 지금과 마찬가지로

지로 대중의 욕망과 대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었다. 미군에 의해 억울하게 자신의 친구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정부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것이다. 대중들은 광화문에 촛불을 밝힌 채 직접행동에 돌입하였다. 당시에도 조·중·동 등의 보수언론과 KBS/MBC 등의 공영방송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대변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온라인 매체에 주목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보수언론의 편집되고 가공된 그리하여 왜곡된 정보가 아닌, 날것들의 실시간 중계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신문에 주목하였고, 언론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가 왜곡된 언론을 변혁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의민주주의 제도 역시 변혁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 면에서 당시의 직접행동은 의식했던 못했던 여전히 대의제적 제도안의 혁명이었으며, 노무현의 집권으로 일정부분 보상받았는지도 모른다.

사실 일정부분 그러했다. 인터넷 언론은 백가쟁명처럼 우후죽순 생겨났고, 어찌되었던 이런 양적 확산은 의제와 욕망의 다양성 확장을 가져왔으며, 조·중·동은 몰라도 KBS와 MBC의 일정한 개혁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KBS와 MBC의 많은 시사 프로그램들은 정연주 등의 코드인사 때문은 아니다. 대중의 흐름에 누구보다 민감한 방송의 특성상, 방송국 내부주체들의 적극적인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2.

하지만 이제와 생각하면 그것의 한계는 명확해 보인다. 인터넷언론과 한·매·경등의 개혁신문들은 결과적으로 조·중·동을 여전히 넘어서지 못했으며,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대되었음에도 대의제적 정치제도는 신자유주의 정책 드라이브 속에서 대중들에게 철저한 배신감만을 되돌려주었다. 이는 노무현정부의 실정 탓도 있지만, 크게 보면 신자유주의 체제, 즉 자본이 이미 세계화된

사회체제 때문이다. 일국적 수준에서는 여전히 국민투표에 의해 정치구조가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정치구조가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철저하게 전 세계 거대자본의 흐름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 탓인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파병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정부, 그래서 결국 김선일씨를 죽음으로부터 지켜낼 수 없었던 정부. 대추리를 죽창과 싸워가며 미군 손에 갖다 바칠 수밖에 없는 정부.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치솟아도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정부. 오늘날 일국수준에서의 대의제민주주의는 결코 민족적 틀 내에서의 대중의 정치의사를 대변하지 못한다. 그것의 반작용으로 황우석이나 심형래의 디워와 같이 우리 스스로를 국가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 키치에 빠져들게 하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노무현 세력의 몰락과 2MB정부의 탄생을 불러왔다. 악무한이 액셀러레이터를 밟기 시작한 것이다.

3.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왜 소고기협상 반대 촛불시위가 노무현 정부가 아닌 2MB정부가 들어서야 드디어 꽃을 피운 것일까? 그것은 2MB가 일국적 수준의 대의제를 대놓고 부정하고 있는 천박함 때문이다. 노무현이 그토록 욕을 쳐 먹었던 말의 성찬, 그 절차적 대의제라는 연극무대가 사라진 공간에서, 귀 막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삽질에 여념이 없다는 2MB의 공포스러운 모습에서, 한미 FTA 그리고 민영화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가 순식간에 낱알이 까발려진 것이다. 우리의 고유한 정체성과 생명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야만 그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성취했던 민주주의의 허망한 위선을.

그래, 그래서 다시 시청 앞 거리에 촛불의 축제가, 저항의 몸부림이 만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거리의 촛불의 2002년 2004년의 그것과는 사뭇 달라 보인다. 오마이뉴스 등의 대의제적 공간에서 댓글을 달기보다는 스스로 의제를 정

하고 스스로의 정치의사를 표현하기로 작정한 듯 보인다. 인터넷 언론에 글을 기고하기 보다는 다음 아고라에서 각종 미디어를 평가하며 스스로 전략전술을 구사한다. 미디어의 탐사보도와 아젠다 설정 역할을 포탈의 광장으로 끌어내린 것이다. 더 나아가 미디어 비평의 영역도 끌고 내려왔다. 전통적인 보수언론 구독거부 운동을 넘어서, 광고주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광고시장에 의존적인 미디어시장의 약한 고리를 직접 타격하고 있다. 그리고 광화문을 벗어나 한강을 건너 여의도로 촛불이 진출한다.

4.

그들이 끌어내린 공간. 포탈의 광장은 언뜻 90년대 4대 PC통신망 플라자 서비스를 연상시킨다. 87년 6월 항쟁과 91년 투쟁의 언저리에서 시작된 90년대 PC통신의 정보통신 운동은 언론운동만은 아니었다. 보수언론에 저항하고자 스스로 미디어에 직접 참여하고 토론하며 의제를 설정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험장이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민중 투쟁의 무기로서 미디어에 주목한 것이었다. 2008년 6월 즈음에 다시 포탈의 광장으로 대중들이 되돌아온, 반복된 이 역사의 경험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다시 출발점에 선 것인가?

필자는 감히 그렇다고 말하고 싶다. 우리는 이제 미디어 자체를 다시 재구성해야 할 그런 출발점에 다시 서 있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촛불이 어디로 가야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87년 투쟁과 2002년 촛불들이 기만과 왜곡으로 가득찬 대의민주주의로 환언되었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5.

여의도에 몰려든 촛불들은 KBS와 MBC가 예뻐서, YTN이 예뻐서가 아니다. 더더군다나 정연주는 더더욱 아니다. 그들도 그 사실을 안다. 그래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대의제적인 아젠다 속에서 그 욕망들을 재구성하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은 방송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지 구호가 공영방송 수호에만 그친다면, 그것은 과거역사의 반복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공영방송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그들에게 친절히 알려주는 것이다. 형식적인 국가기구로부터의 중립성이나 양적 공정성이 아니라, 오늘날 무용지물이 된 대의제를 대체할 직접민주주의의 장으로써, 그래서 수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그 무엇이어야 한다고 요구하여야 한다. 늘 되돌아오는 재원부족이라는 변명을 깔아뭉개려 만큼의 명명백백한 요구. "원래 공영방송은 우리 것이다."

잘 보여주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

6.

이제 인터넷 언론을 비롯한 모든 언론은 한 번 더 진화해야 한다. 사실 그동안 언론들은 그들의 역할 상당부분을 이용자에게 이양해왔다. 1인 미디어 시대이며, 생중계도 직접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더 이상 가르칠게 없다. 핵심은 소통이다. 대중이 있는 곳이면 언제나 있어야 하며, 모든 내용을 대중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더 이상 100분 토론과 생중계는 TV의 전유물이 아니다. 물론 단순히 이런 기술적인 진전 때문은 아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오래전부터 우리는 파탄난 대의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과연, 이 촛불시위의 열기를 과거처럼 대의제적 질서로 환원시킬 정치세력이 오늘날 대한민국 그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 점이 87년, 2002년과 지금 2008년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이다. 누구를 국회의원으로 보낼 것인가로 대리만족하던 시대가 아닌, 일상화되는 직접행동과 직접민주주의의 요구들이 전면화 되는 세상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다.

대의제가 파탄날 수록 결국 미디어의 가치는 더욱 증대한다. 미디어는 대의제의 핵심적 보조수단이기도 하지만 대의제를 위협하는 양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주류사회는 점차 현장과 거리를 두고 모든 정치행위를 여의도로 한정지으려 할 것이고, 반면 일상화되는 직접행동과 직접민주주의의 가두의 요구는 미디어에서 일상적으로 소통될 것이다. 시청앞 광장의 촛불은 한정된 공간에 구획되지 않고, 미디어를 통해 전국으로 그리고 전세계적인 공간으로 확장된다.

그래서 토론과 소통이 핵심이다. 직접적인 소통과 토론이야 말로 파탄난 대의제에 저항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이다. 대의제적 틀 속에서 갇힌 정치투쟁이 아니라, 대중들의 일상적인 삶과 직접 행동들 속에 우리의 미래와 미디어 운동의 미래가 있다. 현장의 수많은 카메라와 생중계 장비, 그리고 명박산성 앞에서의 지리멸렬한 토론이 결코 지리멸렬하지 않은 이유에 민주주의가 있다.

7.

그리고 이제 포탈을 물어보자. 포탈 아니 아고라는 과연 직접민주주의의 성지인가?

국가보안법위반이라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광우병 괴담이 퍼지고 있다는 이유로, 조선일보 광고주에 항의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유로 임시조치가 포탈에 의해 수시로 자행되는 모습은 과연 역사가

진보했는지 묻고 싶은 지경이다. PC통신 시절부터 쌍팔년도 금서목록으로 검열하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여전히 포털과 인터넷 곳곳에서 암약중이다. 한번이라도 포털에서 임시조치를 당해본 네티즌이라면 구차한 설명 없이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미디어융합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오늘날, 오픈IPTV의 성공을 위해 기꺼이 2MB의 품안에 기꺼이 안기는 다음의 모습 속에서, 왜곡된 대의제와 언론에 맞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 공간은 과연 어떠한 곳인지 다시금 뒤돌아보게 한다. 우리가 대의제를 거부하며 끌어내린 그 포털이란 공간은 가장 자본주의적인 상업공간이다. 실명제로 내가 누구인지 언제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는 오간데 없이 정부와 자본에 의한 감시와 검열이 자행되는 투쟁의 현장이다. 내가 올린 지식인의 글과 다음 아고라의 글이 온전히 나의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 글의 저작권은 상당부분 포털사업자의 것이다. 우리는 늘 권리를 착취당하고 있다.

포털은 이제 단순한 온라인 사업자가 아니다. 포털의 세례를 받아 성장한 우리에게 그곳은 직접민주주의가 발화되는 사회 공적 영역이다. 그 공적 영역에서 우리의 권리를 수호하고 국가와 자본의 감시와 검열부터 스스로의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이다. 그 요구에 있어, 우리 스스로도 놀랄 만큼의 감작한 재기와 조롱기 섞인 발랄함은 직접민주주의를 꽃피우는 가장 큰 무기이다.

더 나아가 그런 재기발랄함이 포털에 한정될 필요는 전혀 없다. 사실 그간 포털의 폐해는 수도 없이 지적되어 더 할말도 없을 지경이다. 포털은 인터넷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주류 미디어의 확대재생산으로 담론 왜곡의 주범이다. 그 재기발랄함이 포털을 넘어서는 그 무엇을 꿈꾸지 못하겠는가?

무너진 키치(Kitch)의 왕국

- 촛불집회 현장 생중계의 기록

홍지 |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idiot@jinbo.net

쿤데라 : 'Kitsch' 라는 말은 19세기 독일에서 생긴 말입니다. 그 의미가 점차로 변해 와서 오늘날 프랑스에서는 어떤 유(類)의 미적 스타일, 싸구려 예술을 뜻할 뿐입니다. 그러나 실체는 그것 훨씬 이상이지요. 그건 어떤 세계관에 뒷받침된 미학, 거의 철학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건 인식이 제외된 아름다움이고 사물을 아름답게 만들고 남에게 환심을 사려는 의지이며 총체적인 순응주의입니다.

-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망각 : 밀란 쿤데라 & 앙트완 드 고드마르 인터뷰>, 김화영 옮김, 계간 문학동네 12호, 1997

1. 촛불 : 2007 vs 2008

2007년 4월 2일.

한미FTA 협상이 타결된 그 날 저녁, 협상 타결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세종

* 글쓴이는 평소 활동을 연예활동으로 승화시키며,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다고 노래를 하는 등 얼굴 팔림을 두려워하지 않더니, 민중연은 참세상 촛불시위 현장 리포터가 되어 속사포 같은 말씀씨를 뽐냈습니다. 6월 3일, 6월 7일 양일간 리포터의 입장에서 촛불시위를 바라본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열렸다. '순수한' 시민들은 별로 없었고, 대부분 소위 '권' 사람들이었고, 그 역시 많은 수는 아니었다. 하지만, 협상 타결에 대한 각계의 입장을 '균형감' 있게 실어야 하는 언론사들의 카메라는 전 날 있었던 밤샘 집회 때보다 더 많이 등장했다. 방송국에서 들고 나온 조명들이 워낙 많아서 그 자리는 대낮처럼 밝았다.

우리를 비추는 방송국 카메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자는 사람들에게 나눠준 피켓으로 카드 섹션을 하자고 요구했다. 지금 생방송으로 중계되고 있으니, 방송에 내보내야 된다면서 말이다. 사람들은 "제2의 한일합방"이라며 분노했지만, 아무런 분노가 느껴지지 않았던 카드섹션을 도대체 몇 번이나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욕구를 채운 카메라들은 '(기계적)중립을 지킨 편집'을 위해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사람들도 날이 너무 춥다며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2008년 5월 2일.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최초의 촛불은 청소년들이 들었다. 그들은 "제2의 한일합방"과 같은 거창한 은유 대신에 "나는 저런 거 먹을 수 없다!"라는 원초적인 구호를 외치고 나왔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토론을 한다. 부랴부랴 대책위가 꾸려져서 중앙무대를 만들고 그들의 기운을 북돋아 주려 했더니 도리어 욕만 먹는다.

"우리는 지금 무대에서 노래하는 걸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나온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촛불 집회가 어른들까지 불러 모으면서 규모가 커졌고, 청소년



들이 거부했던 중앙 무대가 등장했다. 촛불이 방송국 카메라에 담기 좋은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자족하는 듯 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촛불이 그런 '감상적인 통속물이나 저급예술' 따위로 머무르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듯싶다. 결국 5월 24일, 촛불은 청계광장을 둘러싼 폴리스 라인을 뛰어넘어 길거리로 나갔다.

2 날(生)스러움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은 '날(生)스러움' 그 자체였다. 광화문으로도 가고, 신촌으로도 가고, 동대문으로도 가고, 서울의 온갖 곳을 돌아다녔다. 오죽하면 정보과 형사들이 면식 있는 활동가들에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다녔을까. 돌아다니면서 하는 행동들도 다양하고, 급작스럽기 그지없었다. 누가 보든 말든 사방팔방에서 온갖 퍼포먼스들(퍼포먼스가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행동일 경우도 많았다!)이 펼쳐지고, 듣도 보도 못한 기상천외한 구호들이 넘쳐났다.

누구나 예상가능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화면에만 익숙한 방송국 카메라에 모든 것을 담을 수도 없었고, 담기도 힘들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가 후렴인 노래를 어느 방송이 생중계로 내보내겠는가? 어느 인내심 강한 방송이 광화문에서 동대문, 심지어 여의도와 강남까지 달려가는 행진을 담을 수 있었겠는가? “우리 이제 방학이다!”라고 적힌 피켓을 부연설명 없이 내보낼 수 있는 방송이 있을까? 편집과 연출이 불가능한 날스러운 거리에 가장 적합한 것은 가장 날스러운 정보 유통 창구인 인터넷뿐이었다.

인터넷 대역폭의 확대와 무선 인터넷의 상용화라는 기술적 발전도 중요한 이유였으나, 거리의 날스러움이 인터넷 현장 생중계를 불러오고 확산시킨 가장 큰 동력이었다.

3. 그래서 어설피

날스러움을 담기에 인터넷 현장 생중계의 내용 또한 당연히 날스러웠다. 거리의 상황에 따라 화면은 멈춰있기도 하고, 정신없이 흔들리기도 한다. 리포터들은 방송국 기자들처럼 말끔한 모습에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지도 않았고,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견지하지도 않았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당황하고 분노하며 흥겨워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정말 어설피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다.

어설피다보니 부담이 없다. 그래서 인터넷 현장 생중계에서 사람들은 손가락으로 브이(V)를 그리며 리포터의 배경으로 머무는 모습 따위는 보여주지 않는다. 오히려 생중계 하는 사람들을 여기로 와라, 저기로 가라 한다.

전북에서 올라온 한 초등학생은 나의 등을 툭툭 치더니 인터뷰 하고 싶다고 한다. 외국인을 인터뷰하게 되었는데, 리포터의 영어 실력이 “아퀼라”는커녕 “오렌지”도 아닌, “오란게”다. 난처해하고 있던 차, 옆에 있던 분이 흔쾌히 통역을 해준다.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한 무리의 대학생 근처로 갔더니, ‘현장 생중계’라 쓰인 노트북을 보고 또 한 번 노래를 불러준다. 심지어 전경들도 인터뷰 요청을 했다. 진압 과정에서 같은 부대에 있는 사람이 다쳤다면 피 묻은 전투모를 보여주며 꼭 찍어달라고 그린다. 그러자 갑자기 한 시민이 달려와서 자기 머리의 상처가 누구 때문이냐면서 자신도 찍어달라고 한다.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요구들이 쏟아진다. 리포터가 조금 숨이라도 돌릴라 치면, 게시판에는 지금 상황을 설명해 달라는 댓글이 금세 올라온다. 인터뷰 내용에 대한 비판 또는 지지의 의견도 올라오고, 카메라가 놓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알려주기도 한다.

나아가 오프라인의 상황을 뒤바꾸기도 한다. 지난 6월 10일, ‘명박 산성’ 앞에서 벌어졌던 스티로폼 논쟁이 바로 그 것이다. 컨테이너에 올라섬으로써 비폭력 직접행동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려 했던 시도들까지 날스러운 인터넷에서는 ‘통제’로 읽히면서, 이 날 인권 활동가들은 적잖이 당황했다.

4. 그러다보니 적나라함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탄핵반대를 외쳤던 촛불을 보면서, 그 촛불들이 언젠가 자신을 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다고 한다. 그리고 “저렇게 수준 높은 시민들을 상대로 정치를 하려면 앞으로 누구라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했다. 그는 촛불이 단지 보기에 아름다운 그림으로만 머무

르지 않을 것임을 알았던 것일까?

지금 촛불은 자신을 싸구려 예술품, 즉 '키치(Kitch)'로 만들어버리는 모든 시각과 시도를 벗어나고 있다. 2002년, 2003년을 거치면서 우리의 기억력 속에 깊이 뿌리내린 핵심적 이미지를 거부하며 그 화폭을 찢고 나와서, 온갖 적나라한 질문들을 쏟아내는 중이다. 대의민주주의라는 그림을 찢어 헌법 제1조를 끄집어냈고, 깨끗하고 조용한 밤거리 풍경에서 집시법을 들추어냈다. 뿐인가, 촛불 스스로에 대한 질문도 멈추질 않는다. 청계광장이라는 근사한 그림을 찢고 길거리로 나왔고, 남성들만 끄는 밧줄의 이미지를 찢어 여성도 함께하기 시작했다. 컨테이너 앞에서 인권활동가들이 상상력을 통한 역사의 진보를 외쳤던 것마저도 '좌파의 키치'일 뿐이라며 되묻는다.

대의민주주의와 그것을 수호하는 질서에 대한 신뢰를 사람들이 거두었기에 대의제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기존의 미디어는 할 말이 없어진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제도를 위해 복무해왔던 미디어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미디어의 연출과 편집이 구축했던 대의제적 키치 왕국을 공격함으로써 이명박 대통령과 국회로 대표되는 대의제에 대한 실망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권'들의 집회에서도 좀체 볼 수 없었던 조·중·동에 대한 여과되지 않은 분노와 그 분노에 대한 당당함이 그 증거이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어떤 미디어도 2007년처럼 감히 촛불에게 "카드섹션, 한 번 더!"를 외치지 못 한다.

인터넷 현장 생중계가 걸치고 있는 두 공간 즉, 거리와 인터넷의 날스러움은 모두가 공감하고 당연히 예상되는 것, 그래서 대답은 미리 주어져 있고, 새로운 질문이 배재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키치의 배제와 날 것에 대한 신뢰. 특히 하면 중계가 끊기고, 화질도 좋지 않은 인터넷 현장 생중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뜰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촛불만난 미디어!

아고라를 진압하라?

바리 |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della@jinbo.net

니맘대로 삭제하다

22일 포털사이트 <다음>이 조중동 광고주 압박운동 관련 일부 게시물들을 동아일보의 요청으로 임시조치 하였다. 임시조치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며, 누군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면 포털이 최대 30일까지 임시적으로 삭제하는 제도이다. 오는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법으로 판단되면 이 글들은 영구 삭제된다.

조중동 불매운동과 광고중단 촉구는 정당한 소비자 주권행사의 일환으로, 이것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상식 밖이다. 더 큰 문제는 게시물을 삭제할 것이냐의 여부가 '포털'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떤 곳인가? 인터넷 등 방송통신융합 미디어에 대한 심의를 맡고 있는 이 기구(위원장 박명진)는 지난달 28일 출범하자마자 다음 카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 '언어 순화와 과장된 표현의 자제 권고'를 내렸다. 국민이 대통령을

'2MB', '간사한 사람'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인격을 폄하한다는 것이다. 덕분에 명목상 독립적인 이 기구는 첫 출발부터 정권 눈치보기 논란에 휘말리면서 그 권위가 실추되고 있다.

불법성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곳은 법원이다. 법원이 아닌 포털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성 여부를 가리는 것은 자의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 과정에서 글을 올린 당사자가 이익을 제기하거나 진술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있다.

이와 같은 인터넷 심의 제도는 정치적 압력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지금의 임시조치 제도가 도입된 후 이랜드 등 거대 기업들이 자사의 노동정책이나 소비자 불만 게시물에 대해 삭제 혹은 폐쇄를 요구하고 포털이 이를 따르면서 논란이 그치지 않아 왔다. 한쪽의 주장만으로 게시물을 삭제하니, 자신에 대한 비판글을 사라지게 하고 싶은 기업이나 정치인 들에게 편리하기 짝이 없다. 아무런 항변 기회 없이 하루 아침에 자기 글을 잃어버린 이용자 입장에서선 부당하기 짝이 없는 것은 물론이다.

임시조치가 소위 '악플' 즉, 명예훼손 등 인터넷으로 인한 개인의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는 하지만, 그 운영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휘둘러서는 참으로 곤란하다.

촛불시위 동안 본격화한 이명박의 인터넷 통제

정치적인 인터넷 통제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기 시작한 시점

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소위 '광우병 괴담'의 진원지로 인터넷을 지목하고 네티즌을 추적하는 등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 조중동 불매와 광고중단 운동 관련한 임시조치는 정부가 요청한 것이 아니지만,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비판 게시물에 대하여 진즉에 임시조치를 요구했던 바 있다. 인터넷을 부정적 여론의 진원지로 적극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후에, 청와대는 인터넷 전담비서관을 신설했고, 경찰은 '인터넷 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한나라당은 사이드카 제도(여론 민감도 체크 프로그램)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모두 인터넷 여론을 초기부터 감시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의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 17일, 서울에서 열린 OECD 장관회의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인터넷은 독"이라고 말한 후에, 18일 이에 화답하듯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인터넷 실명제 확대를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후보시절부터 현재의 인터넷 실명제로는 부족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을 이용해 현재 37개인 실명제 대상 사이트를 210개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인터넷 실명제 연구반을 운영해 왔다.

별명을 사용하건, 아이핀을 이용하건, 인터넷 실명제의 핵심은 하나이다. 정권과 경찰이 원할 때 언제든지 네티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인터넷 실명제는 실명 확인을 하지 않으면 국민이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박탈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이지만,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이용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그 불법성 여부에 대해 여러 전문가가 회의적이었지만 검찰과 경찰은 무리하게 '광우병 괴담'을 수사한다며 이용자를 추적하였고, 이번에는 또다시 조중동 광고중단 운동을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수사기관의 이러한 행태는 거의 아무런 법률적 제한 없이 통신서비스업체에 이용자의 실명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률 때문이며(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통신서비스업체는 이런 요구에 부합하는 실명 정보를 평상시 수집하고 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44조의 5)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는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IP 주소 등 통신내역을 요구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과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감시와 추적이 결국 인터넷 여론을 위축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큰 위협이라는 점이다. 네티즌에 대한 엄포나 다름없는 이런 수사를 통해 정권이 추구하는 목표 역시 네티즌 위축일 것이다.

나도 고발하래

임시조치처럼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인터넷 심의 제도에 대해서는 단단히 손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위헌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이를 위해 노력할 지는 상당히 의문이다. 권력의 뒷선에 있는 사람일수록 인터넷처럼 손쉽게 통제되지 않는 미디어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법제도가 이처럼 무력할 때 국민은 직접행동의 위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미 수천명의 네티즌이 나도 광고불매 운동을 했다며 검찰에 자수(?)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행동이다. 촛불처럼.

더 많이 외치자. 더 많이 글을 올리자. 우리의 직접행동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이다. 우리 뿐 아니라 최근 전 지구의 시민들이 직접행동에 나서고 있다. 쇠고기 문제처럼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어딘지 모르는 먼 곳에서 자신에게 큰 영향을 주는 일이 벌어지게 될 때, 사람들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한계를 느끼고 그 결정 과정에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게 된다. 그래서 학교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짬짬이 거리에 나오고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해 절치부심할 것이다. ‘아이핀’을 이용해 실명제를 확대하려는 잔머리들을 보라. 하지만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저항하기 시작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행동할 것이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계속 서로의 존재를 발견하고 인정하고 강화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니들 맘대로는 안될걸!

미디어를 가지고 놀자, 괴물과 함께 자라자

달군 |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funnystar@jinbo.net

괴물출현

번쩍 번쩍 여기저기서 눈을 떴다. 그리고 눈동자에 순간을 담는다. 그 모습은 마치 천 개의 눈동자가 달린 생물 같다. 앞에도 뒤에도 위에도 눈들이 달려서 깜빡깜빡 거린다. 그리고 어떤 눈은 본체에서 뻗어 나와 어디로든 움직일 수 있는 촉수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보고 다닌다. 언제부터인지 매일 밤 시내에는 괴물이 출현한다. 그 괴물의 몸은 수십만 개의 빛을 내는 아름다운 땡땡이 무늬의 표면을 가지고 있다.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그건 액체라고 하는 게 좋을 모습이고 눈이 천 개가 넘게 박혀 있어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 어디가 입인지 알 수 없다. 수천 개의 소리가 여기저기 구멍에서 설새 없이 흘러나오는데 그건 때로는 성난 고양이 소리 같기도 하고 노래 소리 같기도 하며 비명 같기도 하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괴생명체가 출현했다. 단수인지 복수인지조차 알 수 없는, 아직은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서 괴물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그런데 많

* 이 글은 인권오류 107호에 기고했던 글을 약간 수정한 글입니다.

은 사람이 때로된 아름다운 생명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가? 당연히 당신은 지금 이 글을 쓰는 사람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괴물의 눈이자 촉수이자 무늬이자 본체이자 입일지도 모르니까. 괴물의 정체는 알다시피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협상 문제를 시작으로 모인 사람들, 이제는 정권의 퇴진을 외치며 거리로 흘러나온 사람들,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청계광장으로 나오기 시작한지 한 달, 그 사이 100일밖에 안된 이명박 정권을 점점 위협하는 거대한 괴물이 되었다. 그 괴물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어디가 머리인지 어디로 움직일지 알 수가 없어 공권력은 그것을 가뒤편보겠다고 컨테이너나 쌓고 있다. 괴물은 뭘 먹고 이렇게 커졌을까?

천개의 눈, 천개의 목소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확실한 한 가지는 그들이 쓰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일 것이다. 즉 한마디로 '미디어'다. 한 손에는 노트북을 들고 한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시위를 생중계하는 사람들의 출현, 그것은 기존의 언론/미디어가 아니라 개인들이었다. 노트북을 들고 뛰어다니며 기존 언론이 편집해서 보여주는 것을 넘어 구석구석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내보내니 사람들은 텔레비전에 신문에 갇히지 않았고 집에서 집회와 행진을 함께하다 첫차가 다니자 다음날 거리로 나왔다. 또 수천 개의 수만 개의 눈들이 깜빡 깜빡 자신이 본 것들을 생생하게 구석구석 인터넷으로 전했다. 누구나 들고 있는 휴대폰 카메라에서 부터 디지털 카메라까지 순간을 저장할 수 있는 눈들이 그야말로 빼곡하다. 그리고 그 눈들이 담은 순간은 기존 매체들의 틀에 박힌 사진과는 다르다. 구체적이고 가깝다. 그리고 일단 눈이 많은 만큼 다양하고 많은 순간들이 기록되어 전해진다. 공권력이 폭력을 사용할 때는 이 무수한 눈들을 부릅뜨고 찍어 나른다. 바로 이것이 역감시다. 권력/폭력에 대한 역감시. 뉴스카메라에 어떻게

하면 “진실”이 보도될까, 이 무자비하고 억울한 “현실”이 보도될까 목멜 필요가 없다. 내가 찍어서 전송하면 되니까.

물론 이전에도 이런 것들은 가능했다. 그렇지만 주류 미디어의 힘이 훨씬 강했고 소위 조중동이라는 녀석들이 왜곡을 하면, 인터넷에 올린 나의 진실은 묻혀버렸다.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그것의 감응의 범위와 속도에 가속이 붙은 지금 주류 미디어의 거짓말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주류 미디어의 왜곡 보도라는 게 뭔지, 미디어라는 게 대체 뭔지 슬슬 깨닫는다. “미디어가 보내는 정보는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발신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선택된 견해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스카야 아키코 지음, <<미디어 리터러시>>)”는 것을 깨닫는다. 한 달 간 길거리 특강을 매일매일 받은 셈이다. 미디어 혹은 담론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현실과 사실과 진실의 관계는 이런 것이다. 상황과 서로가 서로의 선생이 되어주고 있다.

밤에 거리를 누비던 액상 괴물(들)은 낮에는 집에 들어가 그날 본 것을 자신의 블로그나 아고라 같은 곳에 기록하고 전파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분석하고 토론한다. 랜선으로 무선 신호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괴물들의 구성성분들은 흩어져서 다시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사람들이 이 괴물을 어떻게 의미짓고 이해하고 있는지 분석해본다. 그리고 앞으로의 행로를 고민하고 토론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다시 공감대를 만든다. 물론 공감대의 형성은 단일하지 않다. 그것들은 다시 경합하고 토론하며 길에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이것은 힘이 된다. 저 무지한 관료들, 통치자들 그리고 그들의 소리통이었던 주류 미디어를 와들와들 떨며 기다리게 할 힘이 된다. 괴물은 이 모든 상황들을 우적 우적 먹으면서 그 안에서 화학작용을 일으키고 증식되거나 함께할 다른 이들을 불러 모은다.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미디어를 가지고 놀 수 있는 능력

나는 괴물이 되었다가 괴물을 보다가 집회 시위의 현장이 하나의 교육장이라면 지금 우리는 미디어라는 교과를 제일 크게 배우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다. 동영상이나 기술영역 등으로 협소화된 의미의 미디어가 아니라, 표현/텍스트 생산과 읽기 그 자체로서의 미디어 말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미디어에 굉장히 예민하고 기민한 반응을 보이며 행동한다. 어떻게 주류 미디어를 읽어야 하는지 해석해야 하고 자기 표현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계속 실험하고 배워가는 중이다. 그리고 그 어떤 시위에 비해서 그 능력은 급진적이다. 미디어가 형성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읽어내면서 미디어를 사용하여 표현해 가는 능력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누구나 미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랜선을 타고, 무선 신호를 타고 인터넷에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소통하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그리 어려움 없이 거침없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누구나 인터넷과 영상촬영기기, 디지털 카메라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다. 이 재료들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조건들은 세대 간에 계급 간에 편차가 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생각을 텍스트화(그것이 활자든 소리든 영상이든)하고 유통시키는 것은 특정영역의 사람들의 역할로 인식되어왔다. 즉 특별한 능력이었다.

개인적으로 어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온라인으로 다시 힘을 일으키는 행동을 해보자는 기획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 본다. 그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파업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아니겠는가 하면서 스스로의 글을 모아 인터넷으로 알리면 어떨까 하는 제안이 나왔었다. 하지만

글쓰는 일이 익숙하지 않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고, 그것을 할 물리적 시간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그 기획은 실행되지 못했다. 글쓰는 것 외의 매체를 그들이 다룰 줄 알았다면 어땠을까? 혹은 그 표현의 문제 -미디어로 자신의 상황과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았다면 어땠을까? 그들은 담론을 생성하고 상호교감할 능력을 갖지 못했다.

시위 현장이 자기표현과 유통의 실험실이 되면 어떨까? 그 미디어를 활용하는 능력을 나누고 서로 교육하는장, 서로의 능력을 교환하는 장이 되면 어떨까? 이명박 정권을 규탄하는 행진을 하는 한편, 모인 사람들 그리고 아직 모이지 않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말을 무기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면 어떨까? (교육이라는 말이 위계적인 느낌을 갖지만 그것을 대체할 말이 딱히 없는 관계로 그대로 사용함.) 여기서 우리가 서로 학습해야 할 미디어를 활용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기능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순히 사진찍는 기술, 영상 촬영기법, 인터넷사용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요즘 우리가 거리에서 몸으로 배우는 그것들이다. 즉 내 생각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교통하는 경험이 가져오는 것들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의 미디어-표현물들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들은 나에게 어떤 행동을 이끌어 내고 있는가를 이해하고 그것을 스스로의 표현에도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쌍방향적인 소통이 가져오는 효과들, 자극들을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것, 그것을 내 언어에 사용할 상상력 그리고 그 흐름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소통 매커니즘의 파악 능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사실 이미 매일매일 괴물이 되어 움직이는 사람들은 "학교가 된 거리"에서 이러한 것을 모두 배우고 있다.

그렇지만 당연하게도 이 학교 밖과 학교안 그리고 학교 안에서도 미디어를 활용하는 '능력'을 자기것으로 만드는 기회는 균등하지 않다. 이미 어떻게 다루어

야 하루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아직 그것을 모르고 방법을 찾지 못한 사람도 많다.

우리가 그 능력을 서로 키워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지만 하나의 생각을 보태본다. 지난 72시간 릴레이 시위를 함께 하면서, 그동안 영상미디어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현장을 중계하는 것이 굉장한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하나의 스펙터클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위 생중계를 현장에서 큰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몇십 미터 앞의 싸움을 스펙터클로 만들어버리고 뒤에 선 시위대를 관람객으로 만들고 있었다. 시위에 나온 사람들은 어떤 시위의 한 부분만을 보는 사람이 되어 버렸다. 보여주는 사람과 보는 사람. 그것이 없었을 때, 뒤편의 시위대는 앞의 상황을 몰라도 뒤에서 나름의 시위를 만들어갔고 궁극하면 자신의 몸을 움직여 앞으로 나가기도 했다. 그래서 동의가 되면 함께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행동을 하면 되었다. 그렇지만 주말 시청광장의 영상중계는 많은 이들을 무기력하게 앉혀놓았다. 텔레비전 앞에서 우리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전쟁의 관람이라는 현상을 만들어 낼 것이 아니라, 도구가 없는 사람들, 미디어로 표현할 방법을 찾지 못해 답답한 사람들에게 그 도구들을 빌려주면 어떨까? 물론 이미 이런 실험과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고 기존의 생중계도 이런 역할을 해왔지만! 말, 몸짓으로 표현하는 것을 더욱 다양한 미디어 도구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증폭시켜주면 어떨까? 그것이 살아있는 미디어 교육이 아닐까? 아 이렇게 내가 표현하고 싶었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를 느끼면서 새로운 문법, 언어를 배우듯이 체험할 기회들이 열리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 이 시위 현장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투쟁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미디어 교육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어 주지 않을까? 현장에서 소규모의 임시적인 워크샵들이 곳곳에서 열리고 각자의 능력을